



# 해외조세동향보고

Issue 6, 2009년 07월

## OECD본부 조세 동향

### 신 금융위기 : 조세정책차원의 대응방안

현재 전세계는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OECD는 소비와 투자수요 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세정책 수단에 초점을 두고 논의중에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개혁, 세원확충 방안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편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출처: 2009 OECD's Current Tax Agenda 중 The Financial Crisis: Tax Responses pp 13-14

#### □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단기적 조세정책

-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처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요 진작 및 조기 회복을 위해 조세를 경감
  - 단기정책은 수요진작을, 장기 경제성장은 공급확대 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응한 성장친화적 조세정책은 단기 수요 및 장기 공급을 동시에 진작시킬수 있는 정책변화를 요구
  -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 보호를 위한 조세정책 수단이 필수적
  -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정책수단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현행 조세제도의 수준, 구조 등에 따라 차이

○ 법인세 경감을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 지원

- 법인세 관련 정책으로 한시적인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이 가능
  - 경기침체기에는 영업수익이 적거나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세 경감으로는 가시적인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법인세 납부 유예는 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종업원 해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

○ 소득세, 소비세 경감을 통한 소비 촉진

- 소득세 및 사회보장비용 수준은 장기적 경제성장에 중요 요소
  - 다만,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경감은 저소득층만큼 수요 진작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소비세 경감은 빠른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한시적인 경감정책은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지출증가도 기대

○ 주택거래관련 세금 경감을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 주택관련 세금인하는 경제위기 이전의 주택가격 폭등이 현 경제상황 악화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
  - 다만, 주택거래에 관련된 세금인하는 장기적인 부작용없이 현재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

○ 취약계층 지원

- 경기침체기의 가장 취약계층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빈곤층
- 적정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경감은 가처분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
- 과세소득이 없는 최빈계층은 현금, 현물지원이 필요

## □ 성장중심의 조세개혁을 통한 경기회복 강화

- 세계경제가 경기침체를 벗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지출삭감 없이는 위기이전 수준 회복이 곤란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국 정부는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재정비에 착수할 필요
  - 따라서, 위기이후의 조세정책은 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정책, 예를들면 부동산 보유세, 일반소비세, 조세의 공평분담을 위한 과세베이스 확충 등으로 초점을 옮길 필요
    - oecd국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다양하게 운용중이며, 일부 국가는 세수확보를 위한 상당한 여지
  - 상당 규모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소비세 인상이 필요
    - 많은 국가들이 광범위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면제, 저세율의 VAT를 적용하였는바, 철회함으로써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
    - 일부 VAT감면은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나, 분배나 효율측면에서 볼 때 VAT는 넓은 세원에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추가세수를 저소득가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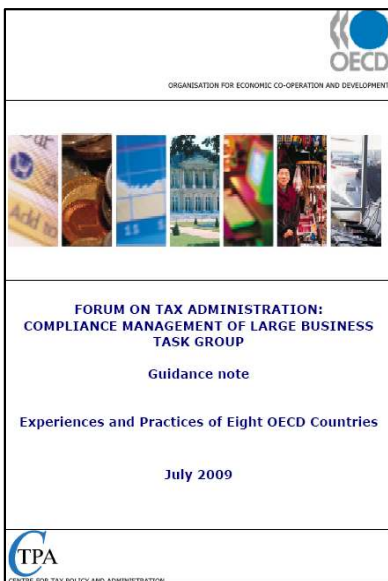
## □ 재정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의 역할

- 조세가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니지만, 조세정책수단간 불합치, 조세피난처의 용인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부채를 활용한 이자비용 공제 등 조세개혁의 확산을 초래
- 기업의 차입에 대한 유인 및 과도한 위험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정교한 개혁은 경제위기의 재발방지 등에 기여할 것
  - 경제위기를 계기로 각국은 부채·자본에 대한 과세취급 등 현행 조세제도를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투명하고 협력적인 조세제도는 건전·지속적인 재정시스템 확보를 위해 필수적

#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납세이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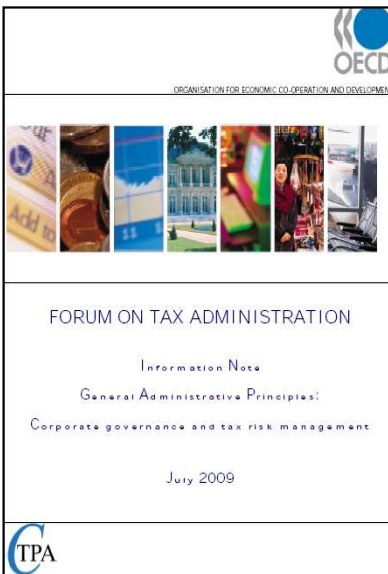
대기업과 고소득 납세자들은 각국 정부의 재정과 과세기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과세 기관들은 이들에 대한 납세행정지원, 납세자 서비스 개선 등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조세행정포럼은 납세이행 및 납세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 대기업 납세이행 가이드 - OECD 8개국의 경험 및 사례



- 각국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징수를 위한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조사대상 43개국 중 34개국에서 운영)
- 본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중 8개국의 사례를 들어 대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세무행정 사례 등을 정리
-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격적 절세 계획 등에 대한 대응사례도 소개

## □ 기업의 경영과 절세계획에 관한 일반적 세무행정 원칙



- 효과적인 절세계획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조세행정포럼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 본 보고서는 기업경영과 절세계획에 관한 최신 보고서로서 호주, 캐나다, 칠레 등 3국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들어 가장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함

## □ 투명한 납세이행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금융기관들은 각국 조세행정시스템과 세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공격적 절세계획의 도구로 금융기관들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효율적인 조세제도 운영에 큰 걸림돌 작용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협조 확대의 방향을 제시